

ISSN 2733-8258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03

2020. 09. 17

www.nafi.re.kr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 흥 범 (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0. 09. 17

Vol. 03

ISSN	2733-8258
발행일	2020년 09월 17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브리프형 심층연구 보고서로서, 미래연구원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前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홍범

- I.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는 왜 필요한가?
- II. 연구를 위한 5대 영역은 어떻게 도출하였는가?
- III. Big Question과 Key Questions의 영역별 미래질문은 무엇인가?
- IV. 미래질문의 해답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 V. 국회가 주목하는 2050 대한민국 미래대비 정책의제는 바로 이것!

붙임 1.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도출 프로세스

붙임 2. 영역별 시나리오 및 종합미래시나리오

- ▶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 미래의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다양한 이슈의 상호관계 분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미래예측연구가 필요
- ▶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13개 분야별 미래예측연구를 고도화하면서 5개 영역별 미래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도출(국회미래연구원, 2019년, 김홍범 편) 연구에서 다양한 미래사회를 예측
- ▶ 다양한 미래 속에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관련 이슈들이 서로의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한 정책의제가 대한민국 미래대비를 위한 초석임을 확인
- ▶ 정책의제는 Business as usual(BAU)을 중심으로 쇠퇴, 지속 성장, 전환 시나리오와의 갭(Gap)분석을 통해 5개 영역별 10대 지향, 대응, 회피 정책의제를 도출

영역	미래대비 정책의제								
	정책 방향성	지향	대응	회피	정책 방향성	지향	대응	회피	
거버 년스	1. 기본소득 혹은 일자리 보장	△	○	○	6. 플랫폼 협동주의	-	△	○	
	2.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	○	-	7.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	△	○	
	3.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	△	○	8. 농어촌 소멸방지 대책	△	△	○	
	4.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	△	○	9.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	△	○	
	5.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	△	△	10.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	△	△	
성장과 발전	1.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	△	△	6.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	-	-	
	2.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	-	△	7. 다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	○	△	
	3.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	○	-	8.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	△	-	
	4.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	○	△	9.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	△	-	
	5.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	△	-	10.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	△	-	
개인과 공동체	1.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	△	△	6.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	○	△	
	2.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	△	-	7. 재택 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	△	○	
	3.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	△	△	8.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	○	-	
	4.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	△	△	-	9.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	△	△	
	5. 손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확대	○	△	△	10.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	△	△	
의식주	1.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	△	△	6.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	△	-	7.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	△	○	
	3.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	△	△	8.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체계 구축 지원	△	○	-	
	4. 생산성 유지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	9.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	△	△	
	5.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	△	△	10.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정책	△	△	△	
휴먼	1. 정년폐지(장기과제), 노인 기준연령 재설정	○	○	-	6.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	○	-	
	2.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	○	-	7. 노인 전용 교도소 등 노인범죄 대응강화	-	○	-	
	3.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	○	○	8. 적극적인 안락사 허용 (스위스 Dignitas 등)	○	○	-	
	4.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마련	○	-	○	9.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	○	-	
	5. 노인 교육 및 치매 관련 정책	○	○	-	10.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	○	○	

※ 직접적인 정책적 관련성(○), 관련성이 직접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관련성(△), 관련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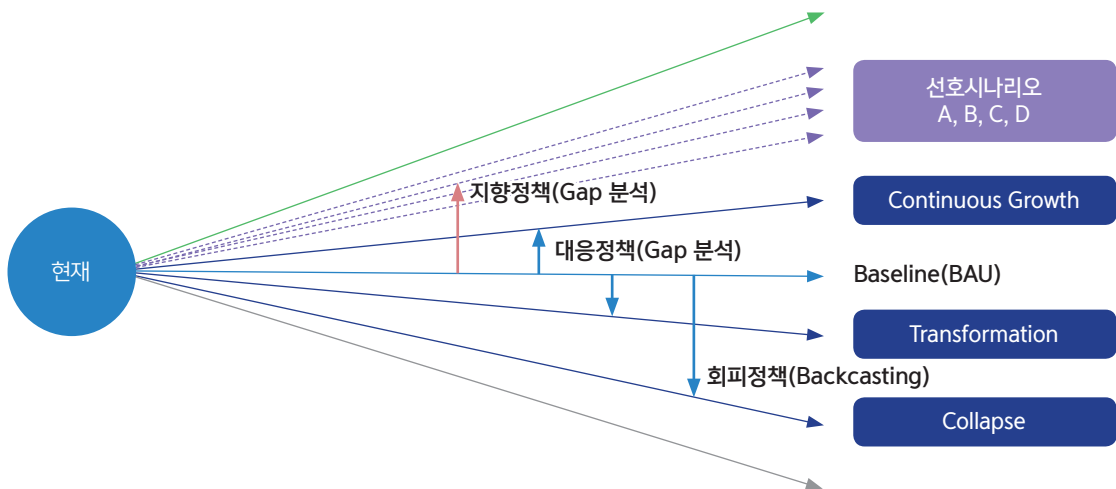
I.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는 왜 필요한가?

● 종합미래예측은 분야별, 영역별, 단편적 미래예측에서 벗어나 국가의 장기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슈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연구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혁신과 Covid-19의 파급에 따른 사회 모습의 변화, 국경없는 세계화 및 세계질서의 변화로 인해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가 도래
-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한 준비는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새로운 기회로의 전환이 가능
- ▶ 급격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반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상호 관계성(종합적 사고)을 확인하여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느냐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최상의 전략

미래의 다양성과 불확실성

- 미래의 모습은 단선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다양한 미래의 모습에 대한 종합적인 예측이 필요
- 예측되는 다양한 미래와 BAU(Business as usual)와의 Gap 분석을 통해 지향, 대응, 회피 정책을 도출



[다양한 미래시나리오의 모습]

II. 연구를 위한 5대 영역 어떻게 도출하였는가?

● 2018년 13개 분야별 시나리오 도출 연구결과(국회미래연구원, 2018, 김유빈 편)를 기반으로 종합미래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5대 영역 확정

▶ 분야별 시나리오의 이슈 중심으로 도출된 영역

- ① 정치행정, 북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중심이 된 정치영역
- ②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체계, 가족관계 및 종교 등에 파급을 주는 과학기술영역
- ③ 경제성장과 에너지/자원 및 식량을 포함한 성장발전영역
- ④ 먹고사는 문제 중심의 거주, 기후변화, 에너지 등이 주요 영역으로 도출

▶ 최종 도출된 정책과제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 ① 에너지, 환경, 생태계 및 기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환경영역
- ② 국제문제, 미중갈등, 남북문제와 경제 다변화 등을 포함한 정치영역
- ③ 자원, 우주 및 과학기술 등이 주요 클러스터로 확인
- ④ 스마트시티, 에너지수요 등 거주에 관련된 영역

▶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구성 및 분석을 통해 5개의 영역을 도출하고 각 영역별 대표 질문 (BQ, KQs) 기반으로 2019년 미래연구 영역으로 확정

※ 이슈/정책과제를 바탕으로 결합관점에서 미래의 핵심인 인간과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삶의 질 등 4개의 영역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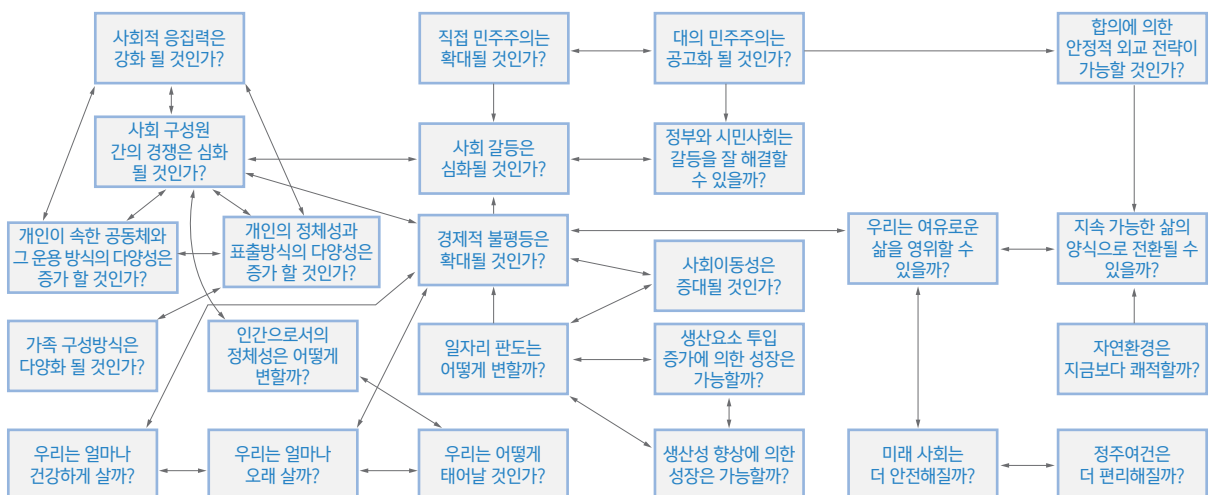
Ⅲ. BQ와 KQs의 영역별 미래질문은 무엇인가?

- 인간(Big Question)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개인과 공동체, 의식주 영역의 Key Questions를 상세 설명할 수 있는 미래질문 도출

영역	미래질문 키워드
거버넌스	① 대의 민주주의의 공고화, ② 사회갈등, ③ 정부와 시민사회의 갈등, ④ 직접민주주의, ⑤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
성장과 발전	① 경제적 불평등, ② 사회 이동성, ③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의 가능성, ④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 가능성, ⑤ 일자리 판도
개인과 공동체	①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 ②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 ③ 개인이 속한 공동체와 그 운용 방식의 다양성, ④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 ⑤ 사회적 응집력
의식주	① 안전한 미래사회, ② 여유로운 삶, ③ 자연환경의 쾌적성, ④ 정주 여건의 편리성, ⑤ 지속가능한 삶
휴먼	①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② 얼마나 오래 살까?, ③ 얼마나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까?, ④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

-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변화 단독이 아니고, 사회변화는 홀로 발생하지 않듯이, 미래변화의 상호 관계성이 미래연구의 복잡도를 의미

※ 예를 들어 205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사회갈등, 대의민주주의,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이동성, 일자리 판도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들 미래질문 간 또는 하위 단계의 질문 등의 관계가 복잡하며 단일한 관계가 아니므로 단일 변화에 따라 방향성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



IV. 미래질문의 해답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 미래질문에 따른 핵심동인을 분석하여 미래질문별 시나리오를 구성

- ▶ 각 미래질문에 따라 핵심동인을 발굴하고 동인의 상세 예측을 바탕으로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미래시나리오를 작성
 - ※ 미래질문에서 출발하여 동인 확정, 영역별 미래시나리오/종합미래시나리오 작성 및 정책의제 도출 등 단계별 항목간 네트워크 분석 및 Cross impact analysis를 실시하고 연구참여자(30여명)의 심층 분석 및 FGI/델파이 등의 연구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확정
- ▶ 미래질문별 미래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종합미래시나리오는 납득 가능한 대표미래를 모두 도출하는 미래원형 기법을 사용*
 - * Peter Schwartz(2004)의 방법을 근간으로 현재 상태의 지속 미래(Business As Usual), 쇠퇴 미래(Collapse), 지속성장 미래(Continued Growth), 전환 미래(Transformation) 등 4가지를 도출
- ▶ 미래동인은 STEEP분석, 내생/외생성 구분, 동인유형(Trend, Uncertainty, Weak Signal, Wild Card) 분석을 거치고 각 동인을 정의하면서 2050년 전망을 포함하는 상세 동인기술서를 작성
- ▶ 미래질문별 시나리오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인 간 상관관계 즉, 동인의 상충성을 분석하여 동인의 독립성을 확인

● 5개 영역별 미래시나리오 핵심 내용을 분석 후, 상호 연관관계를 검토하고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의 키워드를 도출 [상세 내용 : 붙임2]

[영역별/종합 미래시나리오의 간략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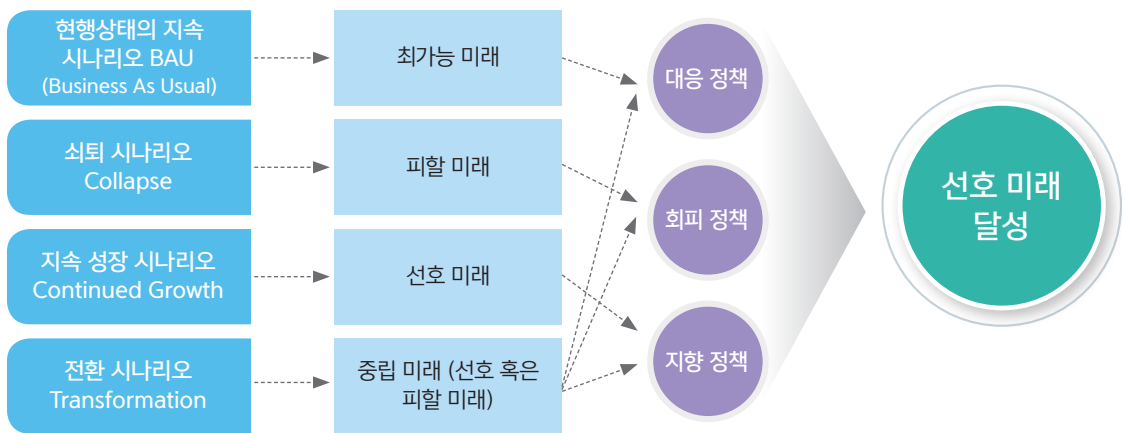
시나리오 유형	거버넌스	성장과 발전	의식주	개인과 공동체	휴먼	종합미래 시나리오
현행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유지	현재 경제의 고착	현재 삶 유지	현재 상태의 고착	현재 추세의 지속	현재 상태의 지속
쇠퇴 시나리오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글로벌 경제파국	삶의 피폐화	공동체의 해체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지속 성장 시나리오	현행 정치/경제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경제의 지속적 성장	윤택한 삶	사회적 신뢰 자본의 증가	수명의 급격한 증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변영과 안정
전환 시나리오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 등장	새로운 발전 시스템	삶의 방식 전환	사회의 변혁	트랜스 휴먼의 등장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V. 국회가 주목하는 2050 대한민국 미래대비 정책의제는 바로 이것!

● 미래대응 정책의제 도출

- ▶ 정책의제는 미래질문별 시나리오와 영역별 시나리오 전개 후, BAU와 대비되는 쇠퇴 시나리오, 지속 성장 시나리오, 전환 시나리오와의 갭분석을 통해 대응, 회피, 지향 정책의제 도출
- ▶ 영역별 각 10개씩의 정책의제들이 종합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시나리오의 맥락에서 정책이 유효할 것이냐 하는 논리적 개연성을 확인

[미래시나리오와 대응, 회피 및 지향 정책의제의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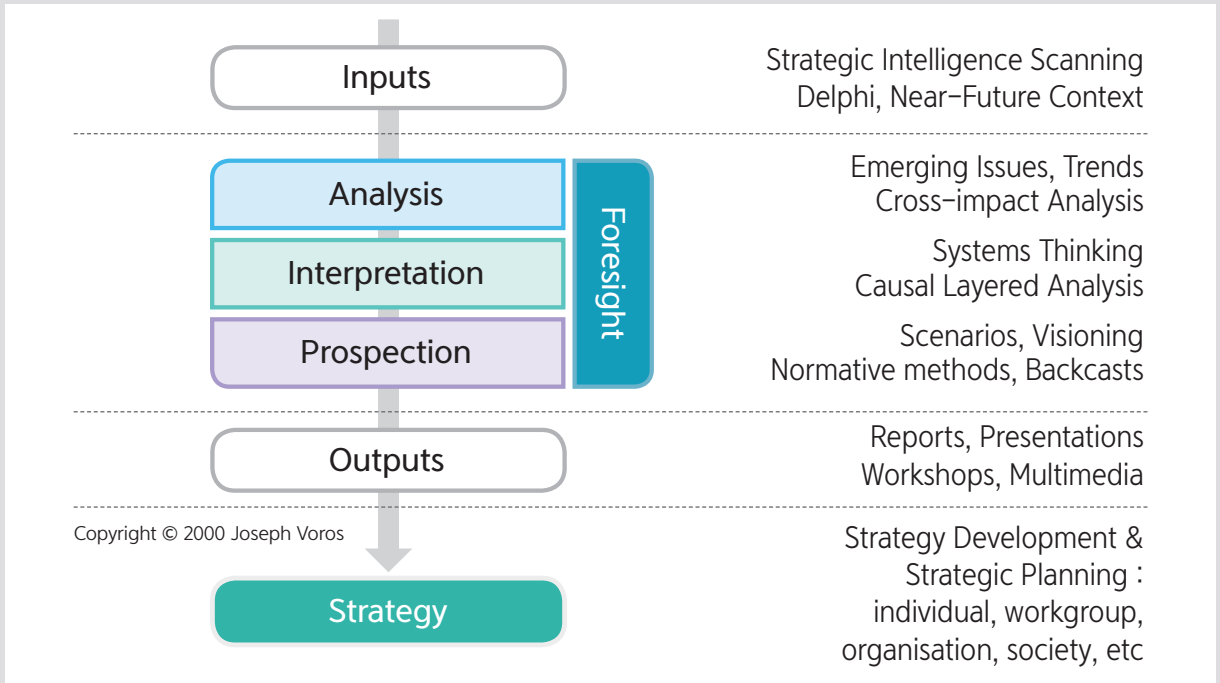
- ▶ **대응정책** :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 상태의 지속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정책
- ▶ **회피정책** : 쇠퇴 시나리오는 한국 사회가 피해야 하는 미래로 상정하였으며 해당 미래를 피하기 위한 조건을 약화하거나 혹은 해당 미래 달성 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 ▶ **지향정책** : 지속 성장 시나리오는 우리 사회의 시민 대다수가 선호할 것으로 상정하여, 선호 미래에 대응하며 이 선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한 동인을 강화하는 정책

● 국회가 주목하는 2050 미래대비 대한민국 50대 핵심 정책의제

영역	미래대비 정책의제	
거버넌스	1. 기본소득 혹은 일자리 보장	6. 플랫폼 협동주의
	2.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정부 구축	7.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3.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8. 농어촌 소멸방지 대책
	4.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9.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5.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10.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성장과 발전	1.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6.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2.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7. 다문화/다양성 교육강화
	3.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8.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4.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9.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5.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10.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개인과 공동체	1.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6.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2.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7. 재택 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3.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8. 4차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4.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	9.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5. 숲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확대	10.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의식주	1.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6.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7.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3.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8.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4. 생산성 유지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9.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5.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10.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정책
휴먼	1. 정년폐지(장기과제), 노인 기준연령 재설정	6.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2.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7. 노인 전용 교도소 등 노인범죄 대응강화
	3.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8. 적극적 안락사 허용 (스위스 Dignitas 등)
	4.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마련	9.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5.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10.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붙임 1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도출 프로세스

[Voros(2003)의 미래예측 과정과 예측방법]



[국회미래연구원(2019)의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도출 프로세스]



붙임 2 영역별 시나리오 및 종합미래시나리오

종합미래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Business As Usual)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Continued Growth)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Transformation)
거버넌스	현재 상태의 유지	실질적 민주주의의 쇠퇴	현행 정치/ 경제시스템의 안정적 성공	새로운 정치/ 경제시스템의 등장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정치권에 의한 시의 도구적 활용	시가 정치인의 정략적 이해 관철에 전략적으로 이용	의회민주주의의 공고화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균형	플랫폼 정부의 탄생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행정부 우위, 양대 정당제 및 소선거구제	제왕적 대통령제, 의회 기능 약화 및 사법부의 행정부 종속과 대중융합주의의 횡행	민주적 정치문화와 삼권분립의 정착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제 등장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갈등 종류의 다양화와 횡수 증가	갈등의 횡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양상이 극단화 및 폭력화	갈등이 대의제 내에서 표출, 갈등의 극단성 약화 및 갈등 횡수 감소	갈등의 감소 및 약화
정부와 시민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사후적 미봉책적 갈등 관리	극단적 갈등으로 갈등관리 능력 부재 및 포기	선행적 갈등 관리	예측적 갈등 해소
합의에 의한 안정적인 외교 전략이 가능할 것인가?	갈등적 국제관계가 국내 정치의 양분된 갈등으로 연계	갈등적 국제관계에 대한 대내적 대응이 붕괴	갈등적 국제관계가 대통령-의회 여-야간에 협상/ 합의로 대안 마련으로 이어짐	강화된 국제 거버넌스 등장과 국내 거버넌스 동조화
성장과 발전	현재 경제의 고착	글로벌 경제파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새로운 발전 시스템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경제성장 정체	마이너스 경제성장	완만한 지속 성장	성장중독 탈피
일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느린 감소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급속 감소 시나리오	일자리 증가	Post Work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비교우위 유지 시나리오	내수, 글로벌 수요 정체로 인한 하락	비교우위 유지시나리오	탈성장 경제시스템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불평등 확대 시나리오	불평등 확대 시나리오	불평등 완화 시나리오	사회가치 다원화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이동성 유지	이동성 하락	이동성 증대	이동성 증대
의식주	현재 삶 유지	삶의 피폐화	윤택한 삶	삶의 방식 전환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선형적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경제 저성장 및 초고령화로 인한 평범한 삶 영위	로봇과 자동화로 일자리 위협 및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족한 사회	웨어러블, 가상현실 기기의 확대와 고용률 증가로 인한 경제력 확보 통한 풍요로운 삶 영위	로봇과 인간 공존, 웨어러블 확대에 의한 인간 육체 한계 극복 등의 새로운 전환사회

종합미래시나리오	현재 상태의 지속 (Business As Usual)	경제적 파국과 공동체의 해체 (Collapse)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번영과 안정 (Continued Growth)	새로운 인류사회의 시작 (Transformation)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환경친화와 편의주의의 절충된 사회, 자동화 및 3D프린팅으로 개인 맞춤형 사회	과소비, 과도한 친환경 고집, 공유경제의 정체로 인한 비효율적 사회	공유경제 실현,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건설적이고 창조적 사회	친환경적이고 개인 맞춤형의 새로운 경제체제 실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현 상태 유지 만으로도 위험한 사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악화로 인한 오염사회	자연환경(대기, 수질, 토양)의 상태 호전으로 인한 에코사회	자연친화적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를 통한 쾌적한 생태계 사회
미래사회는 안전해질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현재 안정이 유지되는 편안한 사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사회	범죄,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안전 사회	보안이 강화된 보안사회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유지되는 지속 사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악화되는 불편한 사회	주거환경, 교통 여건의 편리성이 강화되는 스마트 사회	첨단과학기술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연결사회
개인과 공동체	현재 상태의 고착	공동체의 해체	사회적 신뢰자본의 증가	사회의 변혁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될 것인가?	개인 중심 가치관 확산과 비정형성 가족 증가	1인 가족 증가와 가족해체	시민연대계약 형태의 가족 비율 증가와 출산율 제고	Polygamy, 생물학적 유대 관계를 벗어난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 등장
공동체 운영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방식이 온라인과 시민단체로 이행되며 기존 체계와의 갈등 심화	다양한 공동체 운영방식이 교대로 등장하며 사회적 혼란 극심화	중앙집권적 세력과 네트워크화된 소비자와 시민 단체들 간 분업과 협업체제 구축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공동체 운영방식 도입과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 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다양한 매체를 통한 1인 방송의 증가와 Deepfake 뉴스 증가하나 통제 가능	가상현실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다양성의 폭발과 Deepfake 기술 발달로 통제의 불능	인공지능 통역으로 다양성 제고와 Deepfake의 적절한 통제	가상현실 기술과 인공지능 통역으로 개방적 포용적 다양성 증가와 Deepfake 검열 인공지능 플랫폼 발달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사회적 신뢰 수준과 경쟁 지속	사회적 신뢰 저하와 실업률 증가로 사회불안 심각	사회적 신뢰 점진적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 진행	생산성의 비약적 상승과 인간의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 경쟁의 최소화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될 것인가?	사회갈등 심화와 사회적 분열 지속	집단적 저항 현상과 극단적 대립 등장	사회적 수용성 증가와 사회적 신뢰 제고	사회적 연대 기반의 자치권을 지는 도시 등장
휴먼	현재 추세의 지속	수명의 양극화와 유전자 양극화	수명의 급격한 증가	트랜스 휴먼의 등장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까?	자연 출산율의 유지	유전자 양극화와 아기 공장	출생 장소의 다양화	신인류의 탄생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기대수명의 88.9% 내외	기대수명의 86% 내외	기대수명의 90% 내외	기대수명의 92% 이상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88세	80세 내외	100세 내외	120세 이상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할까?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현 상태 유지	인류로서의 정체성 단절과 다중정체성에 대한 탐닉	인류로서의 정체성 유지 및 다중정체성 강화	신인류와 세계시민 출현

붙임 3 정책의제 유형 확정

※ 직접적인 정책적 관련성(○), 관련성이 직접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관련성(△), 관련없음(-)

▶ 거버넌스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기본소득 혹은 일자리 보장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발달로 인한 구조적 실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 실질적 민주주의의 유지와 현재 정치, 경제시스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서 구조적 실업의 진행 중에도 안정적 일자리 제공 필요
플랫폼 정부를 위한 지능 정부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은 21세기 전반기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자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정부 서비스 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제 강화 및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향 정책
고급인력의 국외이탈 방지 대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사회로 이행되는 중에 역량 있는 한국 청년이 해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마련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IT 플랫폼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등이 다양화되고 심화될 위험이 있는 미래를 회피하기 위해 갈등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는 IT 시스템 구축 점검 필요 갈등의 심화가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대응과 예방적 갈등관리 정책 제시
공무원의 역할변화와 디지털 역량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전환기 디지털 역량은 상당히 중요 디지털 문해력과 아울러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등의 디지털 범용 기술에 대한 활성화 정책 마련
플랫폼 협동주의 (트레버 솔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경제는 전 세계적인 독과점으로 흘러갈 경향에 대한 적극적 정책 마련
예측적 갈등관리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사회의 갈등비용을 줄이고, 건강한 갈등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 구축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갈등을 전망하여 예측적 거버넌스를 마련
농어촌 소멸에 대응하는 디지털 농업 산업 육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통계적 예측으로는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 중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선호 미래를 추구하고, 지방소멸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지향, 대응, 회피 정책
미래세대의 이해관계 반영체계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세대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이를 통해 미래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책분석 인공지능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분석에 인공지능 체계 도입에 대한 연구 진행 필요 정부의 효율성 증가와 정책 지체를 최소화 가능

▶ 성장과 발전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직장 중심 사회보험 제도 탈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규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에 따른 수입이나 부가가치세 방식의 사회보장제 제도 도입 경제 및 사회활동 중심의 복지제도는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미래사회에서 대한 대응 정책이고, 정규고용이 아니라도 유의미한 사회, 경제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지향 정책이며 고용 위주의 왜곡된 복지제도가 몰고 올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
경제적 플랫폼 독점 방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면서 온라인의 오프라인, 실물경제에 대한 지배력 강화 플랫폼 공급자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력 약화에 대비하는 정책 개발 플랫폼 운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는지 감시하고 의결 및 자본 참여 법으로 플랫폼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공동 참여하도록 하고, 의결권을 주는 제도 마련 플랫폼 독점을 막는 사용자의 플랫폼 운영 참여는 플랫폼 독과점 추세에 대한 대응책이고, 사용자의 플랫폼 참여를 통해 상생을 추구하는 지향 정책이며 플랫폼 독과점이 몰고 올 사회적 갈등을 회피하는 정책
생산가능인구 70세로 상향, 연금개시조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년층의 재교육, 경제활동 지원 필요 생산가능인구의 상향은 연금 및 복지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여론 수렴해 점진적 시행 생산가능인구 65세에서 70세로 상향은 노동인력 감소에 대한 대응책 이고 재정부족의 위험을 최대한 늦추고 회피하는 정책
한국은행 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발행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가 등장할 경우 부진한 국내 핀테크 시장 활성화 정책 마련 글로벌 기업, 외국 정부의 디지털화폐 시장확장에 맞서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장기 로드맵 실행 외국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택추세에 따른 대응책이고 여타 민간 기업들의 암호화폐 확산으로 인한 통화주권 상실 위험을 회피하는 정책
글로벌 노동과 플랫폼에 대한 세제 개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의 이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로 이뤄짐에 따라 소득과세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 글로벌 노동, 플랫폼으로 인한 세수 유출을 회피하는 정책이고 글로벌 노동을 수용하는 노동정책을 지향하는 것이며 외국기업의 국내 노동 시장 교란에 대응하는 정책
지방에 스마트 실버 빌리지 건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과 수도권외의 부동산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은퇴자들을 겨냥한 스마트 시티, 빌리지 비수도권에 건설 은퇴자들이 저렴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첨단 주거지역을 조성하고 여러 채의 집을 옮겨 다니며 거주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방도시 공동화에 대응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정책이고 은퇴노인층을 활용해 생산성이 높은 고령화 사회를 지향하는 정책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다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인구비율이 10%를 넘어섬에 따라 새로운 국가 정체성 수립과 교육 시스템 정비 • 다문화 배경의 국민들이 경제, 국방,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 국적에 자긍심을 갖고 능력을 발휘하도록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단위의 공유서비스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는 향후 교통서비스, 거주 공간 외에 일상용품과 개인 서비스 시장에도 확대 • 커뮤니티 단위로 일상용품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기여한 지분에 따라 수익을 얻는 공유서비스 지원 •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소비를 지향하는 정책 제안
공유형 혁신생태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특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형 혁신센터 구축 • 정부의 R&D 자금은 기업과의 매칭 연구에 한해서 공유형 혁신센터에 지원 • 공유형 혁신으로 지역거점 도시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정책이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지방 중심의 정책
인간과 지능 로봇의 협업 지원 제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품종 유연 생산이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인간과 지능로봇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장려 • 완전 자동화 로봇보다 협업 로봇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 기계와 인간의 협업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현상유지를 지향하는 정책 이고 노동력 수요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

▶ 개인과 공동체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Deepfake로 인한 가짜뉴스 및 보안 대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및 SNS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을 갖추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가짜 여부를 검증해주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
지역균형발전 위한 기업과 인력의 지방분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로 인력의 지역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지역 내 대학출신자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보건의로 인력의 지역유치를 위해 지역대학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 교육하고 양성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도입) 제공 필요
인공지능과 공유경제 취약계층 보호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 착한 공유경제와 공유경제의 탈을 쓴 플랫폼 기업과 구별하여 정책의 다변화 • 공공의 민간영역침해 등 불법업체 단속 •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나지만 어느 정도의 실업의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에 고용안전망 구축이 필수적 • 일상생활의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위한 정책수립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이 모든 데이터를 독점, 근로자와의 협상력 차이로 과도수익 제재 방안 마련 • 사회 양극화에 따른 갈등 고조에 따른 관련 산업 성장 저해 요소 제거를 위한 정책 개발
전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공동협력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확보 • 실질 대안 마련을 위한 추가적 연구 실시 • 국제법 활용을 통한 국가 간 상호 책임성 확보를 제안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IT 시스템의 인간 지배 예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 견제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 알고리즘 개발과 시스템 작동 디자인에 사람을 위한 사람을 보호하는 알고리즘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규칙과 제도 마련
재택근무 및 원격 근무 체계 수립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R, 5G 기술 등이 원격 근무 체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접 제도적 방안 마련 •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장려 인센티브를 제공
4차 산업혁명 소외계층 위한 교육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및 온라인 접속을 통해 해결하거나 생활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예산과 교육 지원
가족개념 재정립과 관련 법령정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자관계(partnership)와 가족에 대한 열린 태도는 조기 가족형성에 기여하는 환경 제공 • 넓은 사회적 수용성과 함께 동거하는 커플에 대한 차별(사회적 차별과 복지혜택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종식시킬 법적 안정성을 위한 계획 수립 • 가족형태(커플결합)의 다양성(동거커플, 비동거커플, 결혼한 부부, 재결합 커플) 인정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윤리 제고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윤리 및 예절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전개 • 개인의 디지털 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규제 방안 마련

▶ 의식주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자녀 양육환경 대폭개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감소 위기는 국가 존망의 문제로서, 합계출산율 상승을 위한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과 대응책 마련 출산장려운동 차원에서 2자녀 이상의 출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양육환경 및 근로환경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시스템 확대 및 강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첨단고속교통 관리시스템의 확대 및 강화 정책 지향 첨단교통수단발달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인한 교통관리시스템의 재조정과 확대
가상·증강·융합 현실 관련 산업 촉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상공간 관련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보완 가상·증강·융합 현실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네거티브 규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 실시하며, 가상현실 기술 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체제 구축
생산성 유지를 위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와 사물의 지능화에 따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어남으로 발생하는 실직과 전직의 이슈에 적절히 대응. 실직 또는 전직할 경우 재교육 보조금 지급하고, 빠른 일자리 변화에 대비할 교육시스템 구축
자동화 및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채택되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 및 교육 확대 인공지능 생산 및 관리사회에서 1인당 소득 및 부양 인구수 문제 해소
기후변화대응 통합지휘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글로벌 이슈이며, 현재 기후변화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마련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 감염병 감시·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선진국형 감시체계 구축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 준비 및 역학 조사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
인공지능을 통한 지식생산 체계 구축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 기반 사업의 확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 마련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인한 지식생산에 대한 입법화 및 신기술개발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화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발전을 견인할 공유경제의 제도적·인식적 틀의 전환 공유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
스마트시티 활성화 및 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의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의 스마트화 요구 확대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 및 확충이 필요하며,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할 새로운 형태의 도시 구축

▶ 휴먼

정책의제 목록	지향	대응	회피	내용
정년폐지(장기과제) 및 기대수명 연동 노인 기준 연령 설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 및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노년층 비중이 증가 • 선호 미래의 경우 기대수명이 상당히 증가할 것 • 미래 변화에 대응 및 지향 정책으로 의미
유전자 치료 집중 연구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전자 치료는 산업 및 복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빅데이터, AI 활용한 정밀의료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의료는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
인공지능 활용 관련 사회적 합의와 법제 마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이 초미숙아 이외에도 활용되는 경우 상당한 사회적 파급이 있을 것 •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용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지향 및 회피정책으로 필요
노인 교육 및 치매관련 정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시나리오에서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인 필요
고령자 친화적 도시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에는 고령친화적 요구사항이 있음 • 사용자 경험의 관점에서 고령친화적 스마트 도시를 연구하고 관련 산업 및 표준을 선도
노인 전용 교도소 설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인구의 비율 증가와 고령자의 극빈층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범치는 비례하여 증가할 것 •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전용 교도소 필요
적극적 안락사 허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접근은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라도 필요
노인 통증관리 체계 구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비율의 증가에 따라 노인 통증관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 • 이를 통해 건강수명의 증가와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가 유인
선출직에 대한 청년층 할당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중 청년층을 일정 수준 할당하는 것이 필요 •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실버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 이는 지향 및 대응 정책이기도 하며, 쇠퇴 미래를 지양하기 위한 회피 정책에도 해당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